

한반도 냉전의 종언을 향하여: 10·3 핵합의와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

서 재 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급박한 상황전개

지난 10월 2일부터 2박3일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던 가운데, 10월 3일에는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이행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더라면 대단한 주목을 받았을 사건이다. 10·3 핵합의에서 북한은 북핵시설의 불능화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이었던 신고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2·13합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로 북핵문제는 이제 내년 1월부터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라 북핵문제 마지막 단계인 기존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10·3 핵합의 다음날에는 2007 남북정상선언이 있었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 합의로 해전과 교전의 지대를 경제협력의 지대로 승화시켰다. 무엇보다도 남포와 안변에 조선협력지대를 건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한의 또 하나의 거대자본이 북한에 진출하는 길을 트게 되었다.

이들 동안에 동북아와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10·3 핵합의와 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이제 북핵문제,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남북관계의 개선 등의 소위 한반도 문제가 포괄적으로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인 10월 9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파국적인 국면으로 빠져들던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상황반전이다.

한반도 냉전의 종언과 경제논리의 부상

10·3 핵합의와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는 무엇보다 국제환경과 남북관계가 동시에 한반도 냉전의 종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빠르면 내년 말에는 한반도 냉전의 종언을 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는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곧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북미수교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냉전종식은 앞으로 불과 1년을 남겨놓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발언한대로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터부를 넘는 빅뱅 수준의 대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 냉전이 종식되면 남북관계는 경제논리가 더 많이 실현될 것이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한국자본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다. 적어도 현재는 세계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는 우리 조선산업이 고갈된 조선소 부지를 북한땅 남포와 안변에서 찾게 되었고 2년쯤 후에는 북한 노동자의 안변대우조선소 취업도 가능해질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 종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존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전 주민을 반미주의로 동원함으로써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의 대북봉쇄 때문으로 전가하고 험난한 고난의 행군길을 불평하지 말고 웃으며 가도록 강요하였다.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실현하면 북한은 제2차 핵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통치이념으로 활용하던 강성대국의 논리로 되돌아가서 경제회생에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며, 남한 자본의 대북진출의 공간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경제논리의 복상은 북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변화의 동력

이러한 전망은 확실히 낙관적인 시각이다. 낙관적인 이유는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새로운 생존전략 추구,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한국의 대북 정책의 3박자 이해가 합치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의 지연전과 벼랑끝 전술로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시간이 다급해졌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이전에, 북한은 부시 임기 전에, 남한은 금년 12월 대선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을 돌파하지 않고는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특히 BDA 금융제재로 미국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3단계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약속받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100억 달러가 기대되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남북 경협 등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하여 이란 핵문제 해결의 선례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대북협상은 이란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거론하기도 하였다. 성동격서의 전법을 노리는 미국에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북한의 생존전략, 한국의 대북정책이 맞물려서 2·13 합의, 10·3 핵합의가 나온 것이며 내년에 시작될 비핵화 3단계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구심은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 적어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소원은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북한은 미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의 소련 프락시(proxy) 정책이 이용당해 온 측면이 있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 군산복합체는 1992년 11월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소련 대응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불량국가,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 온갖 딱지를 붙여서 그럴듯한 프락시(proxy)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소련 프락시(proxy)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커졌고, 이란 핵문제와 이라크 전쟁이 감당하기 벅찬 열전으로 확대되었다. 중동에서의 열전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은 이제 프락시(proxy) 구실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부상 때문에 한반도에 대하여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하기보다는 남북을 통합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강한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탈냉전기 통일정책의 방향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종식, 북한의 핵포기와 경제논리 우선정책, 남한 자본의 대북진출 확대 등은 (토크빌의 패라독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체제가 원래의 사회주의체제로 복원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시장요소의 확대, 경제적 자율화의 확산으로 체제의 적응력은 상승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를 모면하고 생존의 돌파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동서독 통일의 경우처럼 어느 한 쪽의 체제포기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 방안의 현실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의미한다. 남북한은 이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함으로써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여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물류가 소통되는 꿈을 이제는 가질만하다. 또한 북한은 남한기업 유치와 물류 중개를 통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유럽이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민족주의적 야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게 되었고 그 대안의 하나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형성을 시작으로 하여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하였고,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연합(EU)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서해교전과 연평해전의 상흔을 경제협력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로 한 합의는 이미 유럽통합의 논리와 유사성이 있다.

우리는 북한을 붕괴의 대상으로 보고 대북정책을 추구할수록 북한은 더욱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식량난이 온 것은 냉전종식 이후 소련 등 우방국으로부터 에너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듯이, 남한의 1997년 IMF 외환위기도 냉전종식 이후 이념논리에서 경제논리로 변화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이제는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게, 이념을 넘어서 경제논리로 북한에 다가야 한다. 20세기가 냉전과 이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탈냉전과 경제의 시대라는 것을 새삼 되새기며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탈냉전과 경제의 논리로 북한에 다가갈 때 북한이 훨씬 빨리 변화하게 되며 통일도 더 빨리 오게 될 것이다.